

# 데이터 경제의 기초자원, マイ데이터

김원배 정보통신용어표준화위원회(WORDSTD) 위원, 전자신문 부장



현대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환경에서 관건은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할 것인가다. 수많은 영역에서 개인이 생성하는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정보 하나하나가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므로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다. 마이데이터 핵심 개념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이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할 권리를 보유하고, 이를 데이터를 활용할 기업이나 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 마이데이터를 도입한 데이터 3법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을 개정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면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구성되며, 2020년 개정안에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가 포함된다.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한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인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권리 행사에 따라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해 개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정보이동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정보활용 요청에 대한 수동적인 동의와는 구분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본인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한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고,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영역을 다루는 만큼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했다. 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데 엄격한 수준의 직업윤리와 기술적 조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부정한 개인정보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사업과의 겹침, 변칙적인 지배구조도 규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허가제를 운영하는 한편으로, 사업 중 개인정보 보안이 유지되도록 기술적, 물리적 보안시설을 구비하고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인을 선임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정보유출 사고에 의해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그림1] 마이데이터서비스 구성 및 절차

도 요한다.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된 정보를 종합해 일컫는 것이므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때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표준화된 전산상 정보 제공방식인 표준 응용프로그램환경(API)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은행·카드사 등 개별 금융사에 API 구축 의무를 부여하되, 규모·거래빈도 등을 감안해 중계기관을 활용한다.

####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신용관리 등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정보나 금융상품을 자유자재로 관리할 수 있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을 누릴 수 있다. 펁테크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마이데이터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분산된 개인정보를 종합하면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우선 분산된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 수집해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본인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재무현황을 분석하고, 신용상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가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에 활용될 수도 있다. 소비자의 상황에 꼭 맞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한다. 개별 소비자별로 현재의 신용상태와 재무현황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목록을 제시하고, 상품별 가격·혜택을 상세 비교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상품과의 비교 등을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추천하기도 한다.

이처럼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인공지능 활용 등의 확산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초개인화한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는 만큼, 자신이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출된 자신의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고 공개 여부를 통합적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